



북한의 ‘비핵화’ 용의 표명과 정상회담

▣ 개요

- 2018년 3월 6일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비핵화’ 용의 표명, 4월말 남북 정상회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포함하는 6개항의 합의를 발표.
* 북한은 ‘비핵화’를 미국의 확장억제까지 제거하는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의미해왔고, 한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북핵 폐기’로 이해하고 있어 서로의 생각이 다를 가능성 존재
- 2018년 3월 8일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이러한 남북간 합의사항과 김정은의 트럼프 대통령 초청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내” (By May) 만나겠다고 수용함으로써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성사
- 양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한국 내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마냥 낙관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 만전지계 차원에서 합정과 위험을 살펴보려는 노력 즉 “건강한 회의” (healthy skepticism)가 필요한 상황임.

▣ 방북 특사단 언론 발표문

- 첫째, 남과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 둘째, 남북은 군사긴장 완화 및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전화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 셋째,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넷째,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 다섯째, 북측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 여섯째,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남측 남측에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

▣ 우려

- 과거 북한의 약속 파기 사례
 - 1990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
 - 2005년 “9.19 공동성명” :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를 약속한 후 1년 뒤인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
 - 2007년 “2.13 합의” :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
 - 2007년 “10.3” 합의: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 2012년 “2.29” 합의: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 중지와 관련시설의 불능화
-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 스스로를 “핵보유국” 으로 명시
- 특사단 합의 내용 상 함정 가능성
 - ‘비핵화’의 전제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 기존 입장의 반복이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거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는 주장 가능
 -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북핵 폐기를 한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도일 가능성
- 대한민국 특사단의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승인 이후 ‘비핵화’나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언급이 없고,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 남북 정상회담 대한 북한 의도분석과 대응방향

<의도 분석>

- 핵관련 이외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잊게 만들거나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노력
- 한국의 친북한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한미동맹 균열 시도
- 한국 국민에 대한 위장 평화공세로 대북 경각심 완화
- 핵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획득

※ 남북정상 회담의 신중한 접근,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필요

<바람직한 대응 방향>

- “북핵 폐기”를 핵심의제로 선정하는 것이 절대적. 나머지 사안에 관한 논의는 가급적 자제함으로써 북핵 폐기에 모든 노력 집중 필요
 - *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의 확인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북한에 요청
 - * 정상회담의 성공이 아니라 북핵 폐기의 성사에 초점
-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치중하거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에 치중할 경우 비핵화는 멀어지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 초래 가능
-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청사진, 검증방법에 합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어떤 제제의 완화도 고려해서는 곤란
-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확실한 약속이나 로드맵을 제시 받지 못할 경우의 대안 마련
 -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건강한 회의’ 적용. 북한의 과거 합의 번복 사례, 위장평화의 전술 등을 심층 분석, 전반적인 북핵 협상전략 재정립
 - 기존의 경제제재를 지속함은 물론이고, 더욱 강력한 추가 경제제재도 검토(부분적이거나 애매한 양보를 얻은 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해서는 곤란)
 - 미국이 단독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검토하고, 유사시 한국도 동참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단독으로도 작전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이에 관한 한미연합훈련도 검토.
 - 미국 ‘전술핵무기 전진배치’ (재배치)를 비롯하여 북핵 대응을 위한 가용한 모든 대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검토

■ 미북 정상회담 대한 북한 의도분석과 대응방향

<의도 분석>

- 트럼프와의 대등한 회담으로 김정은의 위상 고양, 정상국가 면모 과시
- 핵무기 폐기 과정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핵무장 강화 시간 벌기
- 미국과 핵무기 폐기에 합의하더라도 기만이나 은닉이 가능하고, 불리하면 합의를 파기하면 된다는 계산
- 국제적 대북제재 완화 및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모색
- 핵무기 폐기의 대가로 미북 평화협정을 협의 및 체결하면서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와해 실현
- ICBM 능력만 폐기하더라도 미북 평화협정 협의 및 체결 가능 판단

<바람직한 대응 방향>

-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라는 목표 완강 유지
 - 북한의 ICBM 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의 핵동결이나 부분적 핵폐기 수용해서는 곤란
 - 핵시설과 핵물질(핵탄두) 보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요구하고, 거부 시 강력한 압박정책 재 시행
 - 북핵 폐기에 관한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지속 강화
- ※ 북한의 진의 확인을 위해 회담장소를 워싱턴으로 고집할 필요

■ 정상회담과 상관없이 철저한 북핵대응태세 구비 노력

-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최대한의 경제제재 지속
-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 한미연합전투준비태세 가일층 강화
- “삼축 체계”를 비롯하여 북핵 대응을 위한 전력증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심과 확인 필요
- 수도권 2,000만 명을 비롯하여 전 국민들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 중첩적인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 노력.

- 국민들에게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주지시키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대피소 마련 등의 조치도 강구

■ 국회와 국민의 관심방향

- 우려되는 부분이나 위협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평화적 북핵 폐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 합의를 환영하고, 정상회담을 통하여 진정한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하며, 그의 성공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자세 견지 및 용의 표명
-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정부에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략, 즉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를 위하여 동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와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 존재. 특히 정상회담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플랜 B”와 이후 북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집중적으로 확인
 - 강온(carrot and stick)의 방법 조화 주문
 - 다양한 차선택(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마련 강조
 - 잘못된 합의(Poor Deal)는 결렬(No Deal)보다 더욱 위험함을 주지
 -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자세 견지 촉구
- 북핵 폐기가 구현될 때까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및 방어하고, 중간에 약속한 사항을 북한이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및 철저한 경제제재 지속 또는 강화를 정부에게 촉구
- 북한의 의도도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언급 등은 성급함을 지적하고, 정부에게 신중할 것을 당부
- 북한에 대하여 진정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안전과 번영, 나아가 한민족의 공존공영에 절대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고, 이번에는 약속한 대로 구현할 것을 촉구
- 북핵 문제는 민족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사안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의 “북핵폐기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천. <끝>

KFPF Korea Future Policy Forum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오피스텔 909호 E-mail: wearegoodman7@gmail.com